



# ‘실직 날벼락’ 50대 경비원의 감사 편지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법관 독립 지키는 게  
대법원장 첫 번째 직무  
이규환 헌법재판관 > 24

# 이데일리

www.edaily.co.kr

소셜에 마침표를 찍다.  
www.inicis.com/igay  
읽고, 배우고, 안전하게!  
간편결제 케이페이

020-3772-0114  
2017년 10월 10일 화요일 제264호 20판

## 비정규직 정년 65세로 늘린다더니...

한전 59세 경비원 '계약만료' 일방 통보에... 악몽이 된 황금연휴

文정부 '모드업 마린' 차질피널  
한전 "장부지침 없이는 인장 인쇄"  
31만 파전·용역 근로자들만 불안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59세 경비원들이 추석연휴 직후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60세로 규정된 정년을 연장하겠다는 정부의 실무 작업이 기약 없이 늦어지자, 함께 속이 개박만도를 일할 노조부 공무원·사립학교 관계자는 통보를 약속해 기대감을 부풀려놓고 후속 대책을 제때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 등 한전아트센터에서 근무하는 김모씨 등 경비원 2명은 "10월 31일에 정년 60세로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비정규직으로 계속 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한전과 계약한 경비 용역업체는 이들 경비원들의 사직서를 이미 받은 상태다. 다른 경비원 10명도 순차적으로 사직서를 받을 예정이다. 경비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통보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용역업체에 고용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공공기관 경비원의 정년을 65세로 권고했다"며 "비정규직 제도시대" 발표도 더 말할 수 있는 기대감이었는데, 추석 끝나고 나가더니 너무 억울해 밤잠을 못 자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 7월 20일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사립)사립 직공 고졸 비정규직은 통상 정년 65세를 보장한다"며 "철도, 경찰 등 고령직 인력충족은 별도 정년 설정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령원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8월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한계까지 발표는 늦어지고 있다. 고졸 노조부 공무원·사립학교 관계자는 통보를 약속해 기대감을 부풀려놓고 후속 대책을 제때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공공기관 속 일장은 답답하다. 실 무지렁이 정규직 전환 로드맵 없이 무조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순 없다는 이유에 사다. 한전 관계자는 "경비직 정년은 한전 이 아니라 용역업체가 정한 것"이라며 "공공의 경우 로드맵이라는 정부의 일방적인 방침이 없는 한 10월에 퇴직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용역업체 관계자는 "한전 관계부처로부터 경화된 정년 지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하게 마음대로 결정할 순 없다"고 말했다. 한전 주무부처는 산업 통상자원부다. 이에 노조부 노동사회연구소 측은 "이런 기준 다른 공공기관에도 전한 것과 같은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대신공부에 따른 공공부문 비정규직(기간제 및 파견·용역)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총 31만1888명에 달한다.



30년 만에 '한글'로 바뀐 헌법재판소 휘장. 재평가된 헌법재판관 9명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한글로 바뀐 헌장 조별이 바뀐 채 날리고 있다. 헌장은 헌법 이후 30년간 사용하던 휘장의 형식을 한글인 '한법'으로 바꿔 사용한다고 이날 밝혔다. > 관련기사 27면 연합뉴스

2017년 10월10일자 이데일리 1면 특기사로 퇴사 위기에 처한 한전아트센터 59세 경비원 사연을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 시대’ 발표로 더 일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그런데 추석 끝나고 나가라니 너무 억울해 밤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9월28일, 한전아트센터에서 비정규직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김모(59) 씨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기자에게 이같이 알려왔습니다. 그는 “10월이면 저는 경비를 떠나야 한다”며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김 씨에게 당시 추석연휴는 ‘황금연휴’가 아니라 악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 “추석 끝나고 나가라”... 59세 경비원들 날벼락

사태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당시 서울 서초동 한전아트센터에서 근무하던 김모 씨 등 경비원 2명은 ‘10월31일에 정년 60세로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비정규직으로 계속 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한전과 계약한 용역업체는 다른 경비원 10명에게도 순차적으로 사직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경비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김 씨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용역업체에 고용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공공기관 경비직의 정년을 65세로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갑을 앞둔 이들 50대 경비원들은 문재인정부 일자리 정책에 따라 65세까지 일할 기대가 컸습니다.

당시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행정안전부는 2017년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서울시처럼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통상 정년 65세를 보장한다”며 “청소, 경비 등 고령자 친화직종은 별도 정년 설정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정부 발표와 판판이였습니다. 공공기관은 경비원 등에 고용 연장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밝혔지만 후속 실무지침(정규직 전환 로드맵)이 안 나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속내는 가이드라인만 믿고 근로계약 기간을 덜컥 연장하는 게 부담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한전 관계자는 “경비직 정년은 한전이 아니라 용역업체가 정한 것”이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비정규직 정년 65세로 늘린다더니...

한전 59세 경비원 '계약만료' 일방 통보에... 억울이 된 황규연씨

文정부 '로드맵 마련' 차일피일  
한전 "정부지침 없이는 연장 안해"  
31만 파견·용역 근로자들만 불안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59세 경비원들이 추석연휴 직후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60세로 규정한 정년을 연장하겠다는 정부의 실무 작업이 기약 없이 늦어지자, 업체 측이 계약만료를 일방 통보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약속해 기대감을 부풀려놓고 후속 대책을 제때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동 한전아트센터에서 근무하는 김모씨 등 경비원 2명은 10월 31일에 정년 60세로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비정규직으로 계속 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한전과 계약한 경비 용역업체는 이들 경비원들의 사직서를 이미 받은 상태다. 다른 경비원 10명도 순차적으로 사직서를 받을 예정이다. 경비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용역업체에 고용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공공기관 경비직의 정년을 65세로 권고했다"며 "비정규직 제로시대" 발표로 더 일할 수 있는 기대감이 컸는데, 추석 끝나고 나가더니 너무 억울해 밥집을 못 자고 있다"고 토로했다.

2017년 10월10일 이데일리 1면 토크사로 퇴사 위기에 처한 한전아트센터 59세 경비원 사연을 보도했다.

로드맵'이라는 정부의 명확한 방침이 없는 한 10월에 퇴직하는 게 맞다"고 못박았습니다. 용역업체 관계자는 “한전, 관계부처로부터 정확한 정년 지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업체가 마음대로 결정할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은 당초 2017년 8월까지 발표하기로 돼 있었던 정책이었습니다. 당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8월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지난 7월 20일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서울시처럼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통상 정년 65세를 보장한다"며 "청소, 경비 등 고령자 친화직종은 별도 정년 설정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령명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8월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발표는 늦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전아트센터 사태와 관련해 "7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된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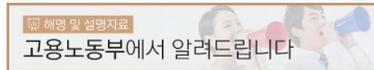
하지만 공공기관 측 입장은 달랐다. 실무지침인 '정규직 전환 로드맵' 없이 무작정 계약기간을 연장할 순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전 관계자는 "경비직 정년은 한전이 아니라 용역업체가 정한 것"이라며 "정규직 전환 로드맵"이라는 정부의 명확한 방침이 없는 한 10월에 퇴직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용역업체 관계자는 "한전, 관계부처로부터 정확한 정년 지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업체가 마음대로 결정할 순 없다"고 말했다. 한전 주무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다. 이에 노광표 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이대로 가면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한전과 같은 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선공약에 따른 공공부문 비정규직(기간제 및 파견·용역)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총 31만1888명에 달한다.

세종=최훈길 기자 choi.hg@joon.com

이데일리입니다  
[고용노동부 해명 및 설명자료] 「비정규직 정년 65세로 늘린다더니...」 기사 관련 설명

고용노동부 2017. 10. 10. 14:34

1인용초기



10월 10일자 이데일리(1면) 「비정규직 정년 65세로 늘린다더니...」 기사 관련 해명과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60세로 규정한 정년을 연장하겠다는 정부의 실무 작업이 기약 없이 늦어지자, 업체 측이 계약만료를 일방 통보했기 때문이다. (중략)
- 지난 7월20일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청소, 경비 등 고령자 친화직종은 별도 정년 설정 등을 통해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중략) 한전 관계자는 '용역직 전환 로드맵'이라는 정부의 명확한 방침이 있는 한, 10월에 퇴직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용역업체 관계자는 "한전, 관계부처로부터 정확한 정년 지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업체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후략)

### <설명내용>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7.20.)' 및 '공공부문 정규직 추진 추가지침(9.22.)'을 통해 정규직 전환대상, 정년 등을 명확하게 제시할 바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17.7.20. 현재 제직자를 전환 대상으로 명시, 청소, 경비 등 고령자 친화직종은 별도 정년 설정(예: 65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추가지침) 고령자 친화직종인 청소, 경비 등 직종이 상당수가 60세 이상임을 감안하여 정년을 65세로 설정할 것을 권고하고, 이후에는 평가를 거쳐 1년 단위 기간제 형태로 계속 고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우리 부는 한전 및 해당 용역업체가 정부 가이드라인 및 추가지침에 따라 정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 한전은 용역업체의 계약하기 용역을 종료할 예정이며, 노사 양측이 협의하여 정년 연장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10월10일 오후 해명 및 설명자료에서 "한전은 용역업체에 계약해지 중지를 권고할 예정"이라며 "우리 부는 한전 및 해당 용역업체가 정부 가이드라인 및 추가지침에 따라 정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적 준비가 길어져 9월 말까지도 로드맵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정책 발표가 늦어지다 보니 이 여파로 한전아트센터 경비원들이 9월에 실직 통보를 받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 상생하는 일자리 정책 필요

기자는 '실직 날벼락' 통보를 받은 경비원들의 억울한 사연을 당시에 보도했습

니다. 실직 통보를 받은 김 씨는 “정부가 정규직 전환이라는 큰 기대를 주고선 복지부동, 눈치보기로 대처하다 보니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상처를 입기도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포털에 수백개의 기사 댓글이 달리는 등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얼치기 선심성이 생사람을 잡는다”, “복지부 동(伏地不動)”, “저것이 바로 적폐” 등 정부에 대한 쓴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이대로 가면 '제2·제3의 한전아트센터 사태'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고 발표해놓고, 신속하고 꼼꼼하게 후속 행정을 밟지 않다가 보니 부처·공공기관 간 엇박자 재발할 것이란 우려에서입니다. 대선 공약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기다리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기간제 및 파견·용역)은 당시 40만명(지자체 포함)에 달했습니다.

이같은 보도가 나온 직후 정부는 부랴부랴 후속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데일리 보도가 나온 2017년 10월 10일 오후 해명 및 설명자료를 통해 “한전 및 해당 용역업체가 정부 가이드라인 및 추가지침에 따라 정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다”며 “한전은 용역업체에 계약 해지 중지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한전과 용역업체는 이들 경비원들에게 '2개월 근로계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당선 직후인 5월12일 첫 공식 현장 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비정규직 직원들과 만났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한전아트센터 모습(사진=한전)

뉴스

● 관련도순 ● 최신순

이데일리 | 2017.10.10. | 네이버뉴스

**고용부 "한전 60세 정년퇴직 경비원, 계속 근로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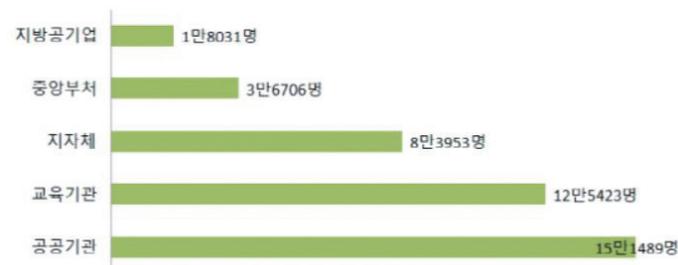
위치한 한전아트센터에서 근무중인 경비원들에게 60세 정년을 이유로 근로계약 만료를 한 것과 관련... 이들 경비원들의 사직서를 이미 받은 상태다. 다른 경비원 ...



고용노동부 해명 및 설명자료 내용을 담은 2017년 10월10일 오후 이데일리 온라인 기사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

[2017년 6월 말 기준 총 41만5602명]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는 2017년 6월 말 기준 중앙·지자체 모두 포함해 41만5602명으로 추산됐다. 자료=고용노동부

약을 연장한 뒤 연내에 발표 예정인 정규직 로드맵에 따라 정년을 연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후 경비원 김모 씨는 기자에게 감사의 뜻을 보내 왔습니다. 그는 “(근로계약 기간을)연장해서 계속 근무하는 걸로 전달을 받았다”며 “(기자님의)노력과 도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은혜 잊지 않고 가슴 깊이 간직하며 살겠다”고 했습니다. 기자로서 보람을 느끼고, 가슴 뭉클했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했던 당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이번 일에 반성하고 심사숙고해 힘없는 노동자들과 같이 살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고용 정책을 만들 때 애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자들을 고려한 보다 섬세한 정책 마련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는 기자가 책임 있는 정책 보도를 해야 한다는 묵직한 ‘죽비소리’로 지금도 가슴 깊이 남아 있습니다.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